

2023년 1월 10일 충북 2023-1호

# 보도자료

이 자료는 1.12일(목) 조간으로  
취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및 통신은 1.11일(수) 오후 4시 이후  
취급 가능)

## 제 목 : 충북 역외소득유출 현황 및 재고찰

- 한국은행 충북본부(본부장 신승철)는 충북지역 역외소득 유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GRDP 대비 역외순유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 등에 대해 고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붙 임 : 충북 역외소득유출 현황 및 재고찰 1부.

문의처 :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강유진

Tel : 043-220-0593 Fax : 043-220-0596 E-mail : chungbuk@bok.or.kr

“한국은행 충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 > 지역본부 > 충북본부 > 보도자료)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 충북 역외소득유출 현황 및 재고찰

강유진<sup>†</sup>, 지정구<sup>‡</sup>

## 요약

최근 5년간 충북의 지역소득 역외순유출 규모가 GRDP대비 약 19%이고 그 대부분이 영업잉여 유출이다. 이에 충북을 비롯하여 역외순유출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출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기에 그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정치·경제학적 논의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에 앞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역외유출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동시에 영업잉여 유출과 지역소득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념적으로 영업잉여는 본사 또는 사업체 소재지 주민의 소득과는 무관한 개념이기에, 순유출이 지역민의 소득수준을 저하시키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인다. 다음으로, GRDP 대비 역외순유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타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고찰한다. 이론상으로 지역 외부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면 자본스톡과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요소소득인 영업잉여와 노동소득(피용자보수)이 동시에 증가한다. 본고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투자증가율이 역외순유출 비중을 높이고, 동시에 가계소득(또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높임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높은 역외유출은 본사가 타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생산 시설을 해당 지역에 유치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데 따른 부산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한편 지자체가 그동안 양적 성장을 위해 중점 추진해왔던 지역-분공장 전략 외에 인적자본 확충, 생산성 제고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용자보수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민의 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sup>†</sup>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이메일: yujin.kang@bok.or.kr

<sup>‡</sup> 한국은행 충북본부 지정구 팀장,

이메일: chunggu.chee@bok.or.kr

## I. 머리말

최근 5년간(2016~2020년) 충북은 전국 최상위 수준인 연평균 경제성장률 4.2%(전국 2.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만큼 '지역소득의 역외순유출'(이하 '역외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sup>1)</sup> 실제 2020년 충북의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69.6조원인데 비해 명목 지역총소득은 57.7조원이다. 박경(2011)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르면 약 11.8조원 규모의 충북 지역총생산이 타 지역으로 순유출된 셈이다. 2016~2020년 중 충북 GRDP대비 역외유출의 연평균 비율도 19.3%로 충남의 23.6%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역외유출은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가 지역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 충남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지역에서 창출된 영업잉여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유출된다는 측면에서 정치경제학적 논의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이에 지역 학계 및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역외유출 규모에 대한 측정, 원인 분석, 정책 대안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전제는 역외유출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인식이다.<sup>2)</sup> 다시 말해서 소득의 역외유출 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지역민의 소득상황이 악화된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역외순유출 최상위 그룹인 충북과 충남 가계의 실질 총본원소득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3.0%, 4.1%로 높은 데 반해 소득의 순유입이 가장 높은 서울과 대구의 경우는 각각 1.3%, 0.8%로 낮은 수준이다.<sup>3)</sup> 소득의 역외유출이 높은 지역민의 총본원소득 증가율이 역외유입이 높은 지역민의 총본원소득 증가율의 2배 가량 된다는 것은 앞선 전제와 양립하기 힘들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현재 방식으로 계산되는 역외유출이 과연 지역민의 소득상황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인지를 고찰하고, 역외순유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높은 현상의 원인을 점검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본사, 지방-분공장의 체계로

1) 지역소득의 역외순유출은 지역총생산(GRDP)에서 지역총소득(GRNI)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여기서 '지역발전'은 지역생산의 실과가 온전히 지역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며 성장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강익(2011)에 따르면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 내로 분배되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 '생산→분배→지출→생산'의 지역경제 선순환 경로를 약화시킨다.

3) 여기서 가계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개념이며, 가계의 경우 고정자본소모 규모가 작기 때문에 총본원소득과 순본원소득은 거의 유사하다. 2020년 충북의 경우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총본원소득은 33.1조원이며 순본원소득은 31.6조원이다.

인한 영업잉여의 역외유출은 지역민의 가계소득과는 직접적 관계가 낮다. 영업잉여는 유출지 또는 유입지 지역민의 소득이 아니라, 자본 소유자(주주)의 몫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잉여의 역외유출이 가계소득을 저하시킨다는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다. 오히려 역외순유출이 큰 지역일수록 지출계정상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높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높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 외부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본스톡과 생산이 증가하고, 일반적인 생산함수 가정하에서는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요소소득인 영업잉여와 노동소득(피용자보수)가 다 같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도 투자증가율이 역외순유출 비중을 높이고, 동시에 가계소득(또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 II. 기존 연구 개관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지역간 경제불균형을 지역별 1인당 GRDP 차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생산소득이 결국에는 분배로 이어진다는 관념이 지배했고, 이에 따라 연구의 초점은 각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서 지역 간 GRDP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허문구(2006), 김종일(2010)은 지역 간 소득격차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공업의 쇠락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확장 등에 기인하고, 이에 따라 저소득지역의 산업구조조정 및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하여 산업 및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통계청이 지역별 분배소득 통계를 공표함에 따라 생산된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이 본격적으로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박경(2011)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역외유출 규모를 산출하고, 충남 지역의 심각한 역외유출의 원인을 '서울-본사', '지방-분공장'이라는 분공장체제의 경제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분공장체제에 대한 인식은 정치경제학적 이슈로 전이되었다. 이강익(2011)은 환경오염 및 혼잡비용 등의 외부비용은 지역에 전가되고 경제적 혜택은 수도권에 갖는 구조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정준호·김동수·변창욱(2012)는 기업의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이 서울에 초집중되는 현상을 타지역에 대한 서울의 경제 권력 행사라고 우려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역외유출의 원인으로 타지역으로부터의 통근인구의 증가와 지역외 본사가 흔히 언급된다. 통근인구는 피용자보수의 역외유출을 의미하고, 지역외 본사는 역내 영업이익의 역외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문구·이상호·김낙현(2015)은 오히려 역내 본사 비중이 높아질수록 역외유출이 늘어난다고 분석하였다. 동 논문은 그 원인이 본사가 비수도권에 위치할 때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피용자보수가 수도권으로 더욱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영업잉여의 유출보다 피용자보수의 유출이 더 심각하며, 따라서 지역정책이 본사 유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되며, 지역 내 인력 육성 및 정주여건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연구로서 조성민(2019)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유출 원인을 분리하여 파악하고 있다. 피용자보수의 경우 지식집약산업 사업체수가 늘어날수록 유출량이 커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그 이유로 지방지역의 경우 지역내 인력수급이 원활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식집약산업이 유치된 경우 통근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영업잉여의 경우 지역내 본사 비중이 작고, 비수도권이며, 정주여건이 미흡할수록 유출량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허동숙·박경(2021)은 영업잉여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의 56.9%(사업체 기준), 64.3%(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총 2,757개 상장사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전체의 40.6%, 서울 포함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전체의 72%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기업 본사 유치노력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시백(2019)은 2000년 이후 전북의 1인당 지역소득(GRNI)이 역외유출로 6% 감소하였음을 보이며, 본사형 지역경제 구축을 대응정책 1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I장에서는 지역총생산에서 지역총소득을 차감한 역외유출이 지역민의 소득수준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IV장에서는 우리나라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생산계정, 소득계정, 지출계정을 살펴보면서 역외유출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의 가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정책 제언을 포함하며 본고를 마무리한다.

### Ⅲ. 역외유출 개념 및 측정의 재고찰

#### 1. 역외유출 개념 및 현황

노동과 자본의 조합으로 부가가치(지역내총생산)가 창출되고 이렇게 창출된 부가가치는 노동의 몫(근로소득 또는 피용자보수)과 자본의 몫(자본소득 또는 영업잉여) 등으로 분배된다.<sup>4)</sup> 그러나 생산주체의 거주지가 발생지와 다를 경우 소득계정의 요소소득과 생산계정에서의 요소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발생지 기준의 GRDP에서 거주지 기준의 GRNI를 차감하면 역외 순수취본원소득(역외순유출)이 계산된다.

<그림1>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민총소득(GRNI)의 관계

지역내 총생산 (GRDP)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 본소모
			요소소득			
지역민 총소득 (GRNI)	순수취 요소소득	순수취 재산소득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 본소모
	역외 순수취본원소득		요소소득			

자료 : 정준호 외 ( 2012 ) 의<그림 3-1>,<그림 3-2>를 재정리

구체적으로 A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부가 B지역의 소득으로 간주될 때 역외유출이, 반대의 경우 역외유입이 발생한다고 표현한다. A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B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민등록상 B지역 거주민이 A지역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본사 소재지가 B지역인 기업이 A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여 자본소득을 취하는 경우이다.

역외순유출 규모는 GRDP에서 GRNI를 차감하면 되지만, 역외순유출을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생산계정에서 요소소득이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생산계정에서 양자가 구분되어 있다면 생산계정의 피용자보수에서 소득계

4) 지역내총생산은 <그림1>과 같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의 요소소득 외에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세도 포함된다.

정의 피용자보수를 차감하면 피용자보수 역외순유출을 구할 수 있다. 영업 잉여의 역외순유출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계산된다. 그동안 생산계정의 요소 소득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데 본고는 배정민(2018)과 같이 지역산업연관표에서 계산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비율을 사용한다.<sup>5)</sup>

<표1>은 충북, 충남, 서울, 대구의 역외순유출 규모를 나타낸다. 모든 시도의 결과는 <부록1>을 참고하기 바란다. 충북과 충남은 최근 5년간 순유출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서울과 대구는 가장 대표적인 순유입지역으로 꼽힌다.<sup>6)</sup> 충북과 충남은 2000년 이후 매년 생산된 부가가치의 약 16~26%가 타지역의 소득으로 순유출되고, 반대로 서울과 대구는 생산된 부가가치의 13~15% 정도 규모인 소득이 타지역으로부터 순유입됨을 알 수 있다.

**<표1> 주요 지역 역외순유출 규모(2020년 기준)**

	1인당 GRDP (명목, 백만원)	1인당 GRNI (명목, 백만원)	1인당 역외순유출 (명목, 백만원)	역외순유출/GRDP*100(%)		
				2020년	2016~2020년 평균	2000~2020년 평균
충북	42.7	35.4	7.3 (유출)	17.0	19.3	15.5
충남	53.1	42.1	11.0 (유출)	20.7	23.6	25.7
서울	46.2	49.0	-2.8 (유입)	-6.0	-9.9	-12.7
대구	23.9	27.9	-4.0 (유입)	-16.8	-17.4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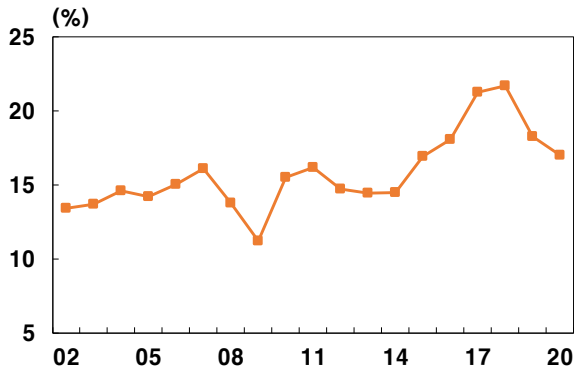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앞서 거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지적대로 역외유출로 인하여 충북과 충남은 소득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충북의 1인당 명목 GRDP와 GRNI가 각각 30.0백만원, 23.4백만원 증가하였는데 김시백(2019)의 주장대로라면 충북은 역외유출로 동기간 중 1인당 6.6백만원 소득증가의 기회가 박탈당한 것이다.

5) 허문구 외(2015)는 소득계정의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비율을 생산계정에 적용하나, 지역산업연관표가 부가가치 발생지 기준으로 작성된 표이므로 생산계정의 요소소득을 계산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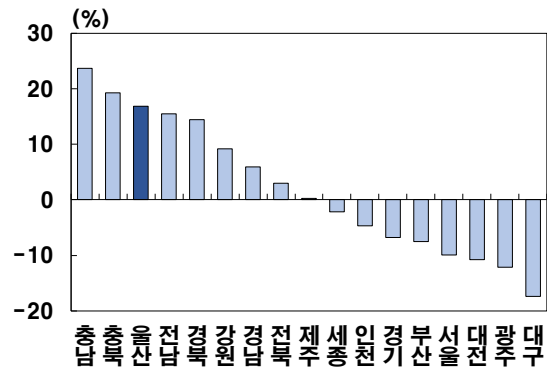
6) 서울과 대구는 지난 20년간 순유입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림2> 충북 소득 순유출입 비중<sup>1),2)</sup>



주 : 1) 음(-)의 경우가 순유출  
2) 순유출/GRDP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그림3> 지역별 소득 역외유출<sup>1),2)</sup>



주 : 1) 순유출/GRDP  
2) '16~'20년중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표2>는 역외순유출을 배정민(2018)의 방식대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분한 결과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2>를 참고하기 바란다. 충북의 경우 영업잉여 순유출이 피용자보수 순유출의 2.8배라는 점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영업잉여가 타지역 본사로 유출되는 것이 충북 역외순유출의 주요인임을 알 수 있다. 충남의 경우도 충북과 같이 타지역 본사로 유출되는 영업잉여의 규모도 크지만 피용자보수의 순유출도 규모도 작지 않다. 이는 허문구 외(2015)와 조성민(2019)이 지적하였듯이 수도권과의 교통 편의성과 지식 집약산업 사업체의 높은 비중 등의 영향으로 통근 근로자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2> 주요 지역 역외순유출 분해

	2016~2020년 평균(GRDP대비, %)			2000~2020년 평균(GRDP대비, %)		
	피용자보수 순유출	영업잉여 순유출	재산소득 순유출	피용자보수 순유출	영업잉여 순유출	재산소득 순유출
충북	5.6	15.4	-1.7	6.2	11.9	-2.6
충남	9.6	13.5	0.6	13.6	12.6	-0.5
서울	0.9	-11.2	0.5	0.0	-15.6	3.0
대구	-14.8	2.3	-4.8	-11.8	2.0	-5.4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한편 서울의 경우 많은 본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영업잉여의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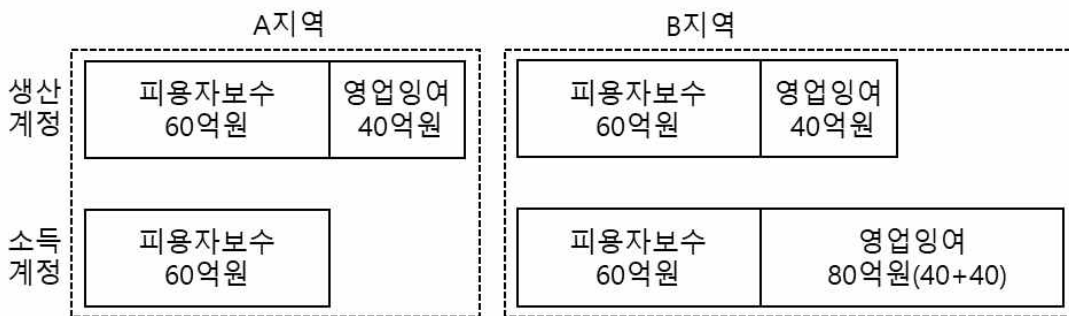


규모가 크다. 그러나 피용자보수의 순유출 규모는 매우 작는데, 이는 서울에서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경우도 많지만, 서울 외곽 지역(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유출과 유입이 상쇄된 결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는 여전히 충북과 충남보다는 본사 사업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업잉여의 순유출 규모는 매우 작으며, 주로 피용자보수에서 순유입이 크게 나타난다. 경북의 피용자보수 순유출 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 다수의 대구 주민이 주변 지역으로 통근하면서 노동소득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 2. 영업잉여 순유출의 재고찰

충북과 충남의 경우 역외순유출의 약 60~80%가 영업잉여의 순유출에 기인한다는 점은 박경(2011)을 포함한 많은 선행 연구가 지적한 대로 지역-분공장 체제의 결과이다. 그러나 분배 문제를 다루는 후생경제학의 대상이 '가계'인데 반해 영업잉여는 '법인기업'의 소득이다. 따라서 과연 영업잉여 순유출이 후생 측면에서 지역민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4>



<그림4>처럼 본사가 B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A와 B지역에 동일한 규모의 공장에서 각각 100억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고,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60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본사가 B지역에 위치하기에 소득계정상 A지역의 소득(GRNI)은 60억원, B지역은 140억원이다. 두 지역의 인구가 동일하게 100명이라 가정하면 A와 B지역의 1인당 GRDP는 동일하게 1억원인데 반해, 1인당 GRNI는 각각 6천만원, 1억 4천만원이다.<sup>7)</sup> 그러나 기업의 본사

7) 순생산물 및 수입세, 고정자본소모, 재산소득이 없는 단순한 경제를 가정한다.

소재지가 B지역이기 때문에 소득계정상에 영업잉여가 B지역의 소득으로 표기된 것뿐이지, 영업잉여 80억원이 B지역 가계의 몫이 아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80억원은 A 또는 B지역에 거주하는 주주의 몫일 뿐이고, B지역민의 소득 및 후생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물론, 현실 경제에서는 본사 소재지에서 본사 근무인원의 피용자보수가 발생하고 가족이 거주하기에 소비생활에 따른 승수효과로 부가가치가 추가로 발생하지만 본질적으로 영업잉여의 순유출은 지역민의 후생과 무관하다.

<표3>에서 1인당 GRNI는 가계, 기업, 정부를 포함한 총본원소득잔액을 인구로 나눈 것이고, 우측은 1인당 가계의 총본원소득잔액(이하 1인당 가계 소득)을 분해한 것이다. 순유출 계산시 영업잉여를 제외할 경우, 1인당 역외 순유출 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의 총본원소득을 제외한 가계 부문 1인당 총본원소득잔액의 지역간 편차는 1인당 GRNI의 편차에 비해 크게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주요 지역 역외순유출 규모(2020년 기준, 명목, 백만원)**

	1인당 GRDP	1인당 GRNI	1인당			(가계) 1인당			
			피용자 보수 순유출	영업 잉여 순유출	역외순 유출 <sup>1)</sup>	피용자 보수	영업 잉여	재산 소득	총본원 소득 잔액 <sup>2)</sup>
충북	42.7	35.4	1.5	6.7	7.3	15.8	1.8	1.8	20.3
충남	53.1	42.1	3.6	7.7	11.0	16.3	2.3	1.8	21.6
서울	46.2	49.0	-0.1	-2.6	-2.8	22.2	2.1	3.7	29.6
대구	23.9	27.9	-4.0	1.3	-4.0	15.7	1.6	2.3	20.9

주 : 1) 지면 한계상 역외순유출의 구성요소인 재산소득 순유출은 생략

2) 지면 한계상 총본원소득잔액의 구성요소인 고정자본소모는 생략하며, 가계의 경우 고정자산소모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본점이 서울에 위치한 한국은행의 경우 2020년 영업이익이 10.2조원이 고, 같은 해 충북의 지역총소득(GRNI, 총본원소득)은 57.7조원이다. 만약 한국은행 본점이 충북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충북의 지역총소득은 단숨에 67.9조원이 되고, 1인당 GRNI도 5.8백만원 상승한 41.2백만원이 된다. 더불어 1인당 영업잉여 순유출도 5.8백만원 줄어들면서, 1인당 역외순유출이 1.5백만원으로 감소한다. 지역소득이 급격히 좋아지는 수치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가계 부문 1인당 총본원소득은 변동이 없다. 한국은행의 영업잉여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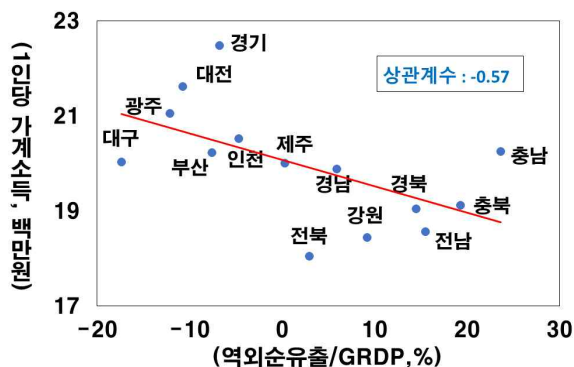
역민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의 영업잉여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지 지역민의 후생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하다. 물론, 본점이 충북으로 이전하고 모든 직원이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다면 약 2천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피용자보수가 늘어났다. 또한 가족이 생활하면서 소비활동을 통해 도내에 부가가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계산하면 이것으로 인해 충북 1인당 가계소득(20.3백만원)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지역소득의 역외순유출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영업잉여는 지역민 소득차원에서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IV. 역외유출과 가계소득의 관계 재고찰

##### 1. 가계소득 수준과 증가율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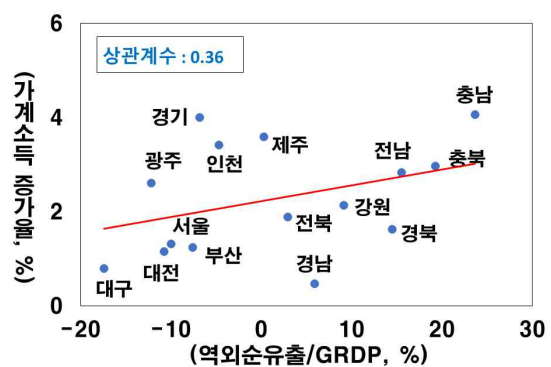
허문구 외(2015)는 2013년 지역별 1인당 GRDP(생산소득)와 1인당 가계소득(분배소득)의 지역분포를 바탕으로 생산이 증가할수록 분배소득은 감소하며, 이것이 역외유출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2016~20년 평균 역외순유출과 분배소득 공간상에 지역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5>에 따르면 소득의 역외순유출 비율이 큰 지역일수록 가계에 배분되는 소득이 낮은 경향이 관측되어 허문구 외(2015)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5> 역외유출과 가계소득<sup>1),2)</sup>



주 : 1) 가로/세로축은 2016~20년 평균 기준  
 2) 서울, 울산 제외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자체시산

<그림6> 역외유출과 가계소득 증가율<sup>1),2)</sup>



주 : 1) 가로/세로축은 2016~20년 평균 기준  
 2) 울산 제외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자체시산

그러나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의 「수준」과 「증가율」의 구분이다. 비록 특정 시점(2016~20년)의 역외유출과 가계소득 수준은 <그림 5>에서처럼 반비례 관계이지만, <그림6>에서 볼 수 있듯이 역외순유출 비중이 클수록 가계소득 증가율은 더 높아지는 정비례 관계가 발견된다. 즉, 역외순유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현재 가계소득 수준은 낮지만, 가계소득이 더욱 빨리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우리는 역외유출이 '분배소득 수준을 낮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춘다'는 것은 수준이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림6>에 따르면 오히려 '역외유출이 분배소득을 빠르게 증가시켜 지역별 소득 불균형을 해소시킨다'라는 표현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표현 또한 성급하게 인과관계를 정의한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역외유출과 개인소득 증가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2. 역외소득 유출과 가계소득 증가율의 비례 관계 고찰

<그림6>에서 보이는 가계소득증가율과 역외순유출의 비례적 관계가 우연한 상관관계인지 아니면 인과관계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충청권의 경우 역외순유출의 상당부분이 영업잉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III장에서 법 인기업의 영업잉여는 직접적으로 지역민의 소득과는 관계없으며, 따라서 현재 방식대로 영업잉여의 순유출로 가계의 분배소득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렇듯 측정 이슈 측면에서 서로 간에 관계가 없는 영업잉여의 순유출이 가계소득 증가율과 비례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 이유를 고찰하기 위해 다시 박경(2011)이 역외유출 발생 원인으로 지목한 '지방-분공장' 체계를 살펴보자.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충북과 충남에서 막대한 규모의 영업잉여의 순유출이 지방-분공장 체계 때문에 발생하였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충청지역에서 대규모의 영업잉여를 얻는다는 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동기업이 충청지역에 그만큼 많은 투자를 실시하였기에 생산설비(capital stock) 규모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식(1)과 같은 1차 동차 생산함수( $F(\cdot)$ )에서 자본스톡( $K$ )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의미한다.<sup>8)9)</sup>

8) 참고로 충북의 경우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자본집약산업의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이러한 산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작기 때문에 대규모의 영업잉여가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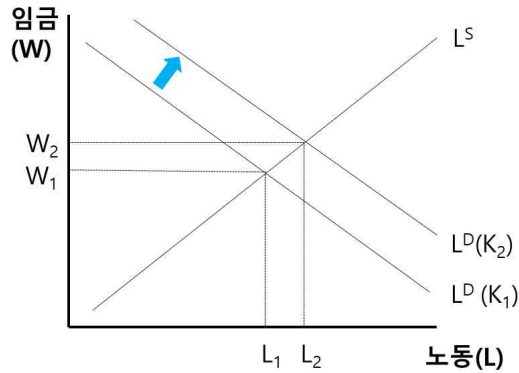
9) 공장 신설 등 투자(I)에 따른 자본스톡(K) 증가는 새롭게 설립된 공장 그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

$$GRDP = F(L, K) \quad (1)$$

$$GRDP = wL + rK^{10} \qua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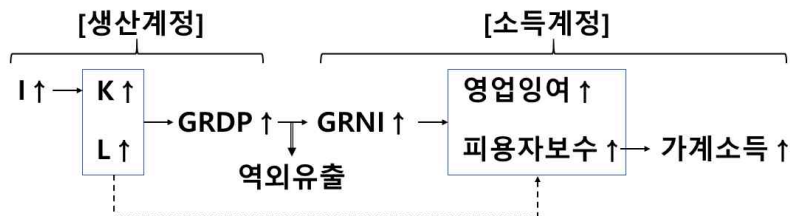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이 안정적인 경우 생산( $GRDP$ )의 증가는 영업잉여( $rK$ , 자본소득) 뿐만 아니라 피용자보수( $wL$ , 노동소득)도 증가시킨다. 구체적으로, <그림7>처럼 자본스톡이 증가( $K_1 \rightarrow K_2$ ) 함에 따라 노동의 한계생산(marginal product of Labor), 즉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균형임금과 균형 노동량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과 임금의 상승으로 피용자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1인당 개인소득도 증가하는 것이다.

**<그림7> 자본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균형의 변화**



요컨대 <그림8>과 같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충북에 투자하여 자본스톡을 늘리면 생산 증가로 인해 수도권 본사로 유출되는 영업이익도 늘어나지만, 피용자보수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그림8> 투자 증가가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



컨대 공장이 신설된 이후 재화 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를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텐데, 이 과정에서 지역 업체의 자본스톡( $K$ )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즉 자본스톡( $K$ )의 증가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에 따른 전체적인 자본( $K$ )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10)  $L$ 은 노동,  $w$ 는 임금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외생적 성장모형’에서도 지지된다. 동모형에 따르면 한 경제가 정상상태(steady-state)의 균형성장경로 상에 있을 때, 투자의 증가는 생산, 자본소득, 노동소득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킨다.<sup>11)</sup> 실제로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2000~2020년 기간 중 충북, 충남, 서울, 대구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의 순위와 자본소득<sup>12)</sup> 순위, 영업잉여 순유출 순위, 가계의 피용자보수 순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4> 지역별 주요지표 (실질, 2000~2020년 평균)**

	역외 순유출 /GRDP *100(%)	역외 영업잉여 순유출/GRDP *100(%)	1인당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1인당 자본소득 증가율(%)	1인당 가계의 피용자보수 증가율(%) <sup>1)</sup>	1인당 가계소득 증가율(%) <sup>1)</sup>
충북	15.5	11.9	3.9	5.2	4.4	3.1
충남	25.7	12.6	3.8	5.9	5.0	3.3
서울	-12.7	-15.6	2.1	3.2	3.6	2.7
대구	-15.2	2.0	2.9	3.2	3.6	2.3

주 : 1) 소득계정의 수치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자체시산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증가된 피용자가 누구냐의 문제이다. 식(3)의 노동소득(피용자보수)은 생산계정상 피용자보수 증가율이다. 생산계정에서의 피용자는 지역민, 비지역민을 구분하지 않고 생산에 기여한 노동주체를 의미한다. 만약 증가된 노동수요가 타 지역민에 의해 채워졌다면 노동소득(피용자보수)의 증가는 지역민 소득과 무관할 수 있다. 그러나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계정상 ‘지역민’ 소득 기준인 1인당 가계의 피용자보수 증가율 및 1인당 가계소득 증가율의 충북과 충남의 수치가 서울과 대구보다 높다는 점에서 고용 및 임금 증가 혜택의 상당 부분이 타지인이 아닌

11) 충청경제가 현재 정상상태의 균형성장경로 상에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가정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text{투자증가율} = \text{자본소득 증가율} = \text{생산 증가율} = \text{자본소득 증가율} = \text{노동소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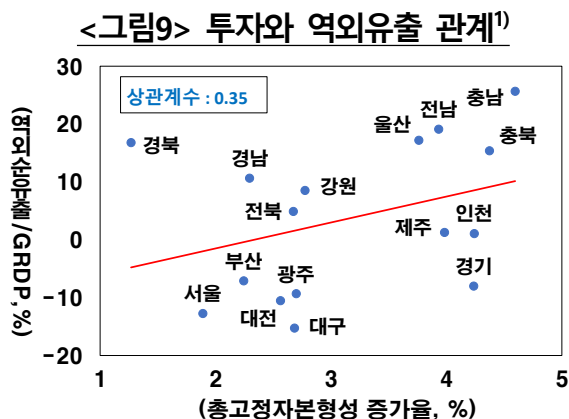
12) 자본소득이 지역별로 추계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자본소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크기를 추정하였다. 고정자본소모는 생산과정에서 마모되는 자본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는 금액으로, 감가상각률을  $\delta$ , 연간 고정자본소모가  $Q$ 라고 하면, 대체투자만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자본소득( $K$ )를 「 $K = Q/\delta$ 」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론상의 개략적인 표현으로 각 지역의 산업별 특징 등에 따른 감가상각률의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지역민에 돌아갔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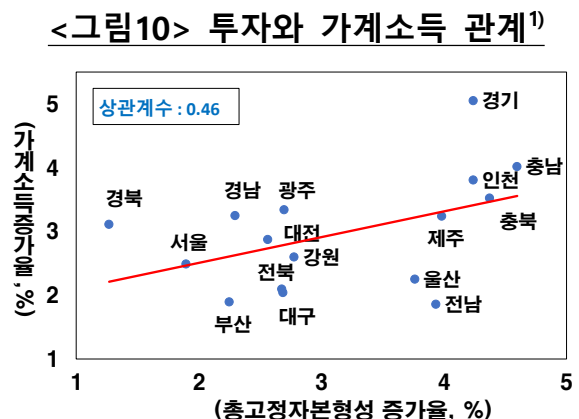
본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역외순유출이 높은 지역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는 양자의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지역 외부에 본사가 위치한 법인기업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함에 따라 역외순유출이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투자에 따른 노동의 한계생산성 증가로 지역민의 고용과 임금이 늘어나면서 피용자보수 및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3. 실증분석

앞 절에서는 투자, 역외유출, 가계소득 증가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일부 지역의 예시를 보였다. 본절에서는 16개 모든 시도의 경우로 확장하고 패널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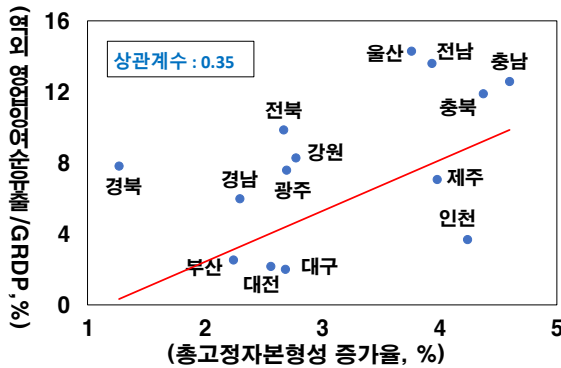
주 : 1) 가로/세로축 모두 2000~20년 평균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주 : 1) 가로/세로축 2000~20년 평균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자체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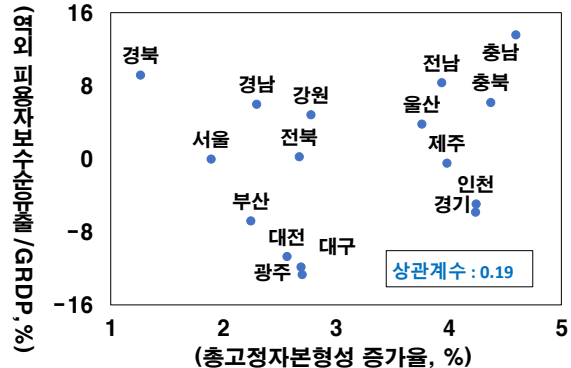
<그림9>는 투자와 역외유출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그림10>은 투자와 가계소득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투자와 역외유출을 세부적으로 분해해볼 필요가 있다. 외지 본사기업의 투자에 의해 역외유출이 증가한 경우라면 그 역외유출은 영업잉여의 유출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피용자보수 유출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11>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와 영업잉여 순유출은 양의 관계로 볼 수 있지만, <그림12>에서는 투자와 피용자보수 순유출의 양의 관계는 관찰하기 힘들다.

<그림11> 투자와 영업잉여 역외유출<sup>1)</sup>



주 : 1) 가로/세로축 2000~20년 평균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그림12> 투자와 피용자보수 역외유출<sup>1)</sup>



주 : 1) 가로/세로축 모두 2000~20년  
 자료 : 지역소득(통계청), 자체시산

<그림9>에서 보이는 투자와 역외유출의 관계의 인과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패널회귀를 실시한다. 투자증가율을  $dlINV_{i,t}$ , GRDP대비 역외유출비중을  $Outflow_{i,t}$ , 시간은  $Year_t$ , 매년 시간 더미를  $Dummy$ 로 둔다. 여기서 첨자  $i$  와  $t$ 는 각각 지역 및 년도를 나타내고 더미변수의  $yy$ 는 00년부터 19년까지의 년도를 의미한다. 2000~2020년까지 자료를 사용한다.

투자의 증가는 산출의 증가를 의미하기에 이를 회귀분석할 필요는 없다. 우선 투자증가율이 역외유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기 위해  $Outflow_{i,t}$ 를 피설명변수로,  $dlINV_{i,t}$ ,  $Year_t$ , 그리고  $Dummy_t$ 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다(모형1). 반대로 역외유출이 투자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기 위해  $Outflow_{i,t}$ 와  $dlINV_{i,t}$ 의 위치를 바꾸어 본다(모형2). 각 지역의 특색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1)의 경우 전년도의 투자증가율( $dlINV_{i,t-1}$ )이 당해년의 역외유출( $Outflow_{i,t}$ )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만 당해 연도의 투자증가율이 당해연도의 역외유출은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앞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투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생산에 사용되고, 이로부터 영업잉여가 발생한다는 내용과 부합한다.<sup>13)</sup> 반면 (모형2)의 경우 당해 연도나 전년도의 역외유출( $Outflow_{i,t}$ )이 당해 연도의 투자를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리하면 투자가 생산에 사용되고 역외유출의 상관관계는 (투자→역외유출)의 인과관계임을 알 수 있다.

13) 식(5)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재가 자본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time to build)가 필요하다.



**<표5> 실증분석 결과 (투자과 역외유출)<sup>1)</sup>**

	(모형1)		(모형2)	
	$Outflow_{i,t}$		$dINV_{i,t}$	
$dINV_{i,t}$	0.041 (0.020)	-	-	-
$dINV_{i,t-1}$	-	0.044* (0.020)	-	-
$Outflow_{i,t}$	-	-	0.217 (0.114)	-
$Outflow_{i,t-1}$	-	-	-	-0.076 (0.093)

주: 1) 괄호( )는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  $p < 0.05$ , \*\*  $p < 0.01$

다음으로 투자증가율( $dINV_{i,t}$ )이 가계소득 증가율( $dHIncome_{i,t}$ ) 또는 피  
용자보수 증가율( $dWIncome_{i,t}$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회귀분석 결과 2  
년전 투자증가율의 상승이 가계소득 및 피용자보수 상승에 유의미하게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해 연도나 전년도 투자증가율의 계수는 95% 신  
뢰구간에서 유의하지 않다. 이 또한 (모형1)과 (모형2)의 결과처럼 투자가 일  
정 기간 경과 후 생산에 사용되고 이로써 노동소득이나 가계소득이 점차 증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6> 실증분석 결과 (투자과 가계소득)<sup>1)</sup>**

	(모형3)			(모형4)		
	$dHIncome_{i,t}$			$dWIncome_{i,t}$		
$dINV_{i,t}$	0.389 (0.206)	-	-	0.437 (0.218)	-	-
$dINV_{i,t-1}$	-	0.316 (0.177)	-	-	0.357 (0.186)	-
$dINV_{i,t-2}$	-	-	0.276* (0.129)	-	-	0.307* (0.134)

주: 1) 괄호( )는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  $p < 0.05$ , \*\*  $p < 0.01$

## V. 맺음말

지금까지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역외유출 현황 및 지역소득 입장에서 역외 영업잉여 유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충북의 경우 충남 다음으로 GRDP 대비 역외소득 비중이 높은 가운데 영업잉여 부문에서 대부분의 소득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영업잉여는 원칙적으로 기업 소유주에 대한 분배 소득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충북의 역외소득 유출은 지역민의 가계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의 역외유출 비중이 큰 지역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 외부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경우, 생산설비(자본스톡)이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민에 대한 고용과 임금도 증가하면서 지역민의 피용자보수 및 가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이 된다. 물론 신규 투자에 따른 지역 내 가계소득 증가 효과의 크기는 지역 내 생산 및 고용 유발 정도에 좌우될 것이다.

요컨대 역외유출은 수도권이 본사인 기업의 생산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데 따른 부산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역외유출이 지역 내 소득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식의 판단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역외유출 자체가 아닌 유출의 원인이 되는 지방-분공장 전략이 현 시점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전략인지 등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기업 등장 등 빠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단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통해 물적자본(K)을 축적하는 전략만으로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지역민의 후생 증대를 꾀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sup>14)</sup> 따라서 그동안의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지방-분공장 전략을 넘어 인적자본 확충, 생산성 재고, 서비스업 발전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적합한 경제 정책이 다각도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sup>15)</sup> 특히 충북의 열악한 서비스업의 규모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하여 소비의 역외순유출을 낮춤과 동시에 지역민의 후생을 향상시켜야 한다.<sup>16)</sup>

아울러 피용자보수의 경우 역외유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지역민의 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부문의 유출 감소를

14) 물적 자본 확대에 따른 외생적 성장은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

15) 교육과 R&D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및 생산성 향상에 의한 내생적 성장은 수확이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

16) '충북의 역내외 소비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김광민, 2021)'을 참고하십시오.

위한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피용자보수 유출은 타 지역 통근자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sup>17)</sup>

---

17) 타 지역 통근자의 충북 내 정착을 유도할 경우, 유출 규모 감소에 따른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생산 증가 → 소득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시백(2019).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ISSUE BRIEFING」, 193, 전북연구원
- 박경(2011).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충남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21(4), 83~113쪽
- 박경(2016). “역외 소득 유출의 형태 및 방향과 지역 분배소득 통계의 신뢰성”, 「공간과사회」, 26(1), 177~218쪽
- 배정민(2018), “대구지역 1인당 GRDP와 개인소득 수준의 차이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조성민(2018),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산업경제」, 2018년 10월, 산업연구원
- 허동숙·박경(2021),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Ⅱ: 국내 현황과 과제”, WP21-17, 국토연구원
- 허문구·이상호·김낙현(2015),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경로 추적과 생산·분배 소득격차 결정요인 분석: 경남지역의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산업연구원

<부록1>

시도별 GRDP 대비 역외순유출 비중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서울	-5.0	-10.1	-9.9	-11.6	-15.0	-13.5	-11.9	-14.7	-14.5	-13.5	-17.1
부산	-11.7	-8.7	-10.0	-4.8	-1.2	-3.6	-5.8	-5.3	-3.0	-4.3	-2.6
대구	-16.2	-17.0	-16.7	-13.6	-13.5	-12.1	-12.1	-9.1	-11.8	-13.6	-12.9
인천	10.5	12.1	9.9	7.4	8.5	6.0	3.9	3.5	-1.9	-0.1	1.2
광주	-9.2	-9.5	-6.9	-8.1	-6.8	-6.6	-6.1	-7.8	-8.2	-8.7	-5.0
대전	-13.1	-15.3	-13.1	-15.2	-14.4	-7.4	-8.6	-8.2	-6.0	-7.5	-4.5
울산	13.3	13.9	14.6	15.0	21.0	20.1	18.0	16.0	14.4	11.1	12.8
경기	-11.7	-4.1	-8.4	-8.2	-11.0	-7.0	-8.7	-7.0	-5.9	-5.6	-10.7
강원	8.1	5.7	6.7	10.1	11.1	8.1	7.7	8.2	8.9	7.1	9.4
충북	14.7	9.2	13.4	13.7	14.6	14.2	15.0	16.1	13.8	11.3	15.5
충남	24.0	23.5	24.7	24.6	24.1	25.7	25.4	25.3	26.4	25.9	29.8
전북	1.8	1.3	4.5	3.6	6.4	3.5	3.9	6.0	5.5	6.8	8.5
전남	14.7	15.6	15.9	18.5	21.7	20.2	17.4	19.8	24.6	18.8	24.7
경북	17.9	18.5	19.4	19.0	18.2	14.9	17.1	18.4	11.4	15.8	19.2
경남	12.6	12.8	14.3	13.5	14.1	13.5	12.8	12.9	11.2	13.0	13.5
제주	-1.7	-5.3	-0.6	1.9	1.6	5.4	2.1	4.6	1.7	5.1	3.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0~ 20
서울	-19.0	-17.7	-16.0	-15.6	-12.4	-12.1	-12.9	-10.8	-7.9	-6.0	-12.7
부산	-8.6	-10.6	-10.8	-11.2	-7.6	-8.3	-7.6	-6.9	-6.1	-9.0	-7.0
대구	-16.4	-16.7	-16.1	-18.6	-17.5	-18.3	-19.1	-16.6	-16.0	-16.8	-15.3
인천	-2.4	-3.0	-3.9	-3.5	-0.9	-2.0	-2.3	-3.9	-7.5	-7.8	1.1
광주	-7.6	-10.1	-10.6	-12.4	-11.0	-11.7	-13.9	-11.7	-12.2	-11.4	-9.3
대전	-7.5	-10.3	-9.5	-12.5	-12.6	-9.8	-13.5	-12.2	-10.5	-7.8	-10.5
울산	19.6	20.7	22.3	24.5	21.1	18.5	20.1	17.4	16.8	11.5	17.3
경기	-7.8	-11.1	-11.4	-7.9	-7.4	-7.0	-6.5	-6.3	-7.9	-6.3	-8.0
강원	8.5	7.9	9.2	9.4	8.1	10.6	9.1	7.7	8.7	9.8	8.6
충북	16.2	14.7	14.5	14.5	17.0	18.1	21.3	21.7	18.3	17.0	15.5
충남	30.0	29.5	27.7	29.2	26.4	25.3	26.7	24.7	20.8	20.7	25.7
전북	8.7	7.2	9.2	7.0	5.6	5.4	4.7	3.6	1.8	-0.9	5.0
전남	25.6	24.8	25.0	22.5	14.6	15.2	15.9	16.5	17.8	12.2	19.2
경북	15.5	20.4	20.3	20.2	15.8	15.8	17.8	15.1	12.6	11.1	16.9
경남	11.4	12.6	13.0	6.1	7.8	7.3	5.4	6.1	5.9	4.9	10.7
제주	-1.5	1.6	1.9	2.2	3.4	3.1	1.9	-1.5	0.3	-2.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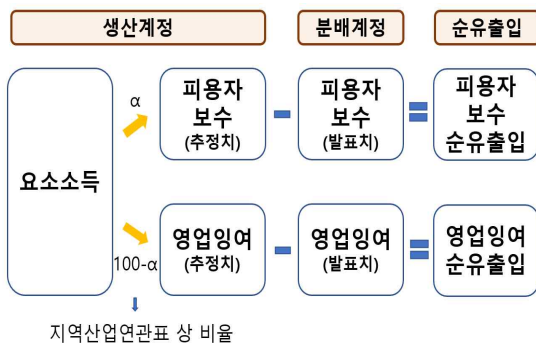
<부록2>

시도별 역외순유출 분해

본고는 지역소득 생산계정 상 요소소득 내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구분이 부재하여 지역간 산업연관표 비율을 활용하여 구분한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한 생산주체가 지급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의 정보가 있어 생산계정 내 요소소득 항목별 추정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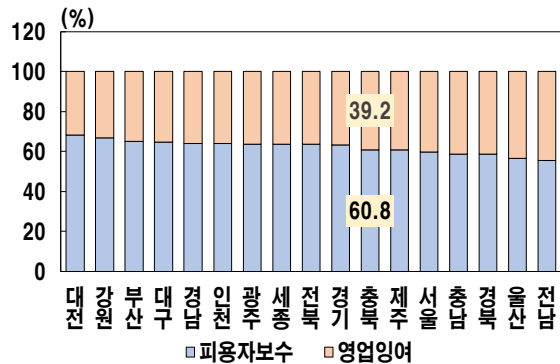
위 방식에 따를 때 충북은 피용자보수 비율이 60.8%로 17개 시도광역시 중 중간 정도 수준에 위치(2010, 2013, 2015년 3개년 평균 기준)한다.

요소소득 분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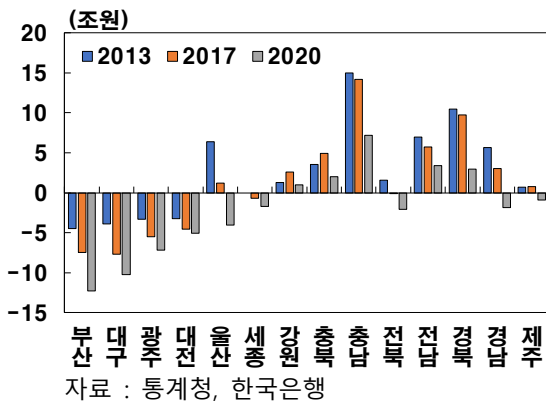


지역산업연관표 상 비율

피용자보수-영업잉여 비율



피용자보수 순유출입 추이(지방)



영업잉여 순유출입 추이(지방)

